202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2025. 5.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5년 4월 21일

2. 회부일자 : 2025년 4월 28일

3.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4회국회(임시회)

□ 제1차위원회(2025. 4. 28.)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 종합정책질의 및 답변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구성

□ 제2차위원회(2025. 4. 29.)

· 종합정책질의 및 답변(계속)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회부

□ 제1차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2025. 4. 30.)

· 상정, 상임위 예비심사결과 보고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11건) 종합조정

□ 제2차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2025. 5. 1.)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11건) 종합조정(계속)

·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원안 가결

□ 제3차위원회(2025. 5. 1.)

·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 원안 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 상 목)

❑ 존경하는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예결위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 드리고자 함.

❑ 글로벌 경제안보 지형이 급변하고 내수 회복 지연에 최악의 산불까지 겹치면서, 우리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엄중한 상황임.

금번 초대형 산불로 약 10만 4천ha에 달하는 산림 피해가 발생하였고, 4천여 채의 주택이 소실되어 아직도 3천여 명의 이재민이 임시 숙박 시설에서 생활하고 계심.

산불로 인한 관광객 수 감소 등으로 지역 경제 전반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음. 정부는 조속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초기 복구에 나섰지만, 현재의 가용 재원만으로는 근본적인 복구와 재발 방지에는 한계가 있음.

❑ 통상 환경도 급변하고 있음.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였으나, 이미 기본 관세와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향후 전망도 불확실함.

이에 정부는 경제안보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부처 회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음.

아울러 지난주에는 “한미 2+2 통상협의”를 개최하여 미국의 관세 면제·유예 논의의 기본 틀이 될, 협의과제의 범위와 논의 일정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통상 환경은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우리 경제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각국의 기술 패권 경쟁 또한 격화되고 있음.

특히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수출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함.

❑ 또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최근 산불 등 이례적 요인의 영향으로 경제심리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서민·소상공인과 같은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민생 여건이 지속 악화되고 있음.

정부는 민생상황의 시급함에 대응하여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액의 60%인 약 233조 원을 1분기 내 집행하였으나,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엔 부족한 상황임.

❑ 존경하는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직접적이고 효과가 있

는 재정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정부는 ①재해·재난 대응, ②통상 및 AI 지원, ③민생 안정이라는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이고 신속하게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선별하여 금번 추경안을 편성하였음.

추경안의 규모는 총 12조 2천억 원으로 세계잉여금, 기금 자체 자금 등 가용재원 4조 1천억 원을 우선 활용하고, 부족분 8조 1천억 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계획임.

❑ 다음으로 추경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음.

첫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해·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3조 2천억 원을 지원하겠음.

초대형 산불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생계·주거비 등을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5천억 원에서 1조 5천억 원으로 3배 수준 대폭 확대하였음.

이재민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기존 생활터전 인근에 신축 공공임대주택 1천 호를 신속히 공급하고, 유실·파손된 주택을 복구하는 데 필요한 자금도 연 1.5%의 저리로 지원하겠음.

산불 피해로 마을이 완전히 소실된 지역에는 마을 기반시설 재건

과 주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역 맞춤형 특별재생사업을 추진하겠음.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가 신속히 산불 복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발행하는 2천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정부가 인수하겠음.

앞으로의 산불을 막기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음. 산불을 조기에 탐지하여 대형 산불로 번지지 않도록 AI 감시카메라 30대를 추가 확보하고 고성능 드론 45대를 포함한 첨단장비를 보강하겠음. 산림헬기 6대, 중·대형 물버킷 30개, 그리고 다목적 산불진화차 48대를 확충하여 공중과 지상의 진화 역량을 강화하겠음.

산불 현장의 최전선에 서 있는 산불 진화대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 보호 장비를 전면 교체하고, 특수 진화대에 월 4만 원의 위험수당을 신설함.

또한,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등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예비비 1조 4천억 원을 보강하겠음.

여객기 사고, 싱크홀 등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공 및 노후 SOC 안전 강화에도 약 2천억 원을 투자하겠음. 특히, 최근 싱크홀이 발생한 서울의 경우 노후 하수관로의 개보수를 신규로 지원하겠음.

❑ 둘째, 통상위기와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4조 4천억 원을 편성하였음.

우선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자금 25조 원을 추가로 공급하겠음.

특별자금의 지원 내용은 저리 대출 14조 7천억 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특례보증·보험 10조 2천억 원, 위기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기업구조혁신펀드 5천억 원 등임.

수출 기업의 관세 피해 분석과 대체시장 발굴을 위한 관세 대응 바우처를 2천 개사 신규 지원하고, 중소기업 전용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도 기존 3천 개사에서 6천 개사로 대폭 확대하겠음.

한편, 외국환평형채권 발행 한도를 기존 12억 달러에서 35억 달러로 증액하여 외환 시장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음.

AI 선도 국가로의 도약에도 1조 8천억 원을 투입하겠음.

고성능 GPU를 올해 안에 1만 장 확보하여 국내기업, 연구진들의 수요를 뒷받침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LLM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AI 정예팀을 선발하여 GPU 2천장 임차, 데이터 구매 등을 위해 2천억 원을 지원하겠음.

해외 최고 수준 연구자 등 석박사급 이상 AI 인재를 2배 확대한 3,300명 수준으로 양성하고, AI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 등에 투

자하는 펀드도 900억 원에서 2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겠음.

한편, 국산 NPU를 활용한 AI 서비스의 본격적인 상용화를 위해 대규모 실증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클러스터당 지원 규모도 70억 원에서 360억 원으로 5배 이상 올리겠음.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음.

먼저,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적기 조성을 위해 전력망 지중화 비용 1조 8천억 원 중 기업 부담분의 70%를 국비로 지원하고, 반도체 설비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2%대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의 공급 규모도 17조 원에서 20조 원으로 확대함.

첨단전략산업 관련 공급망 안정 품목을 생산하는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이 신규로 투자할 경우, 투자 금액의 30~50%를 기업당 최대 200억 원까지 지원하겠음.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을 최대 30%에서 50%까지 높이고, 지원 한도도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확대하겠음.

❑ 셋째, 민생 안정을 위해 4조 3천억 원을 반영하였음.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

인 311만 명을 대상으로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보험료에 활용할 수 있는 50만 원 한도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하겠음.

자금 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 약 8만 명을 대상으로 융자, 보증 등 정책자금 2조 5천억 원을 추가로 공급하겠음.

중신용 소상공인 약 7만 명에게는 1천만 원 한도에서 6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음. 아울러 영세 사업자의 매출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점포에서 사용한 카드 소비 증가분의 20%를 30만 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겠음.

청년과 취약계층 지원도 소홀히 하지 않겠음.
저소득 청년, 대학생 등 금융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 공급도 1천억 원 확대하여 약 3만 명에게 추가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음.

임금 체불로 근로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체불된 임금에 대한 국가 대지급 지원 인원도 약 1만 명 확대하겠음.

❑ 다음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변경요인이 발생하는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자금관리기금, 복권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국고채 발행 등을 통해 수입과 지출규모를 8조 2,605억 원 증액하고자 함.

복권기금은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사업의 보증재원 확대를 위한 사업비 150억 원을 증액하고자 함.

❑ 존경하는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불 피해주민, 자영업, 수출기업 등은 추경안 제출 소식을 듣자마자 집행 소식을 학수고대하고 계시다고 들었음.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일 것임.

재정이 적기에 투입되어 우리 국민과 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조속한 심의 · 의결을 부탁드림.

정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경청하며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겠음.

아울러 금번 추경안이 확정되는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도 철저히 하겠음.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보고자 : 수석전문위원 이 신 우)

1. 개관

가. 추경안의 주요 내용

❑ 이번 추경안은 3월 발생한 산불 피해의 신속한 복구 등 재해·재난 대응, 통상위기 대응 및 AI 등 첨단산업 분야 경쟁력 제고, 내수 회복 지연에 따른 민생 지원을 위한 것으로 총 12.2조원 규모로 편성되었음.

이에 따라 추경안은 ① 재해·재난 대응, ② 통상·AI 지원, ③ 민생 지원 등 3개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음.

'재해·재난 대응' 분야는 총 3.2조원 규모이며,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에 1.4조원, 재해·재난 예방·대응력 강화에 1.7조원, 노후 SOC 개량 등 안전투자에 0.2조원이 지원될 계획임.

'통상·AI 지원' 분야는 총 4.4조원이며, 통상리스크 대응(관세, 공급망, 고용불안)을 위해 2.1조원, AI 생태계 혁신 사업 투자에 1.8조원,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0.5조원을 투자할 예정임.

'민생 지원' 분야는 총 4.3조원 규모로 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2.6조원, 영세·중소 사업자 매출기반 확대를 위해 1.6조원,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0.2조원을 지원할 계획임.

[2025년도 제1회 추경안의 주요내용]

(단위: 조원)

기본방향	총 12.2조원	
	◇ 우리경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① 재해・재난 대응, ② AI・통상 대응, ③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 집중 투자	
주요내용	1 재해 · 재난 대응	3.2
	▸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	1.4
	▸ 재해 · 재난 예방 · 대응력 강화	1.7
	▸ 노후 SOC 개량 등 안전투자	0.2
	2 통상 및 AI 지원	4.4
	▸ 통상리스크 대응(관세, 공급망, 고용불안)	2.1
	▸ AI 생태계 혁신	1.8
	▸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제고	0.5
	3 민생 지원	4.3
	▸ 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	2.6
	▸ 영세 · 중소 사업자 매출기반 확대	1.6
	▸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0.2
	4 기타(국채이자, 주요행사 개최 등)	0.2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25.4.21.

나. 소관별, 회계·기금별 구성

❑ 이번 추경안의 소관 상임위원회 및 부처별 구성을 살펴보면, 총지출 기준 9개 상임위원회 14개 부처의 9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소관 부처별로 증액규모를 살펴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5조 112억원(소상공인성장지원 1조 6,973억원,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 1조 4,345억원 등)으로 가장 큰 규모로 증액되었고, 다음으로는 기획재정부 1조 9,770억원(예비비 1조 4,000억원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조 8,452억원(AI컴퓨팅 자원 활용기반 강화 1조 6,194억원 등) 순임.

[2025년도 제1회 추경안의 소관별 구성(총지출 기준)]

(단위: 개, 백만원)

소관 상임위원회	소관 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수	증액규모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4	386,500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2	1,600,000
		복권기금	1	15,000
		공공자금관리기금	2	361,970
		소계	5	1,976,970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회계	13	1,755,50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	5,000
		정보통신진흥기금	3	74,680
		방송통신발전기금	1	10,000
		소계	18	1,845,184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일반회계	1	8,177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일반회계	2	660,93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	17,678
		소계	3	678,608
	소방청	일반회계	2	7,363

(단위: 개, 백만원)

소관 상임위원회	소관 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수	증액규모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	115,000
	해양수산부	일반회계	1	6,18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	20,000
		소계	2	26,180
	산림청	일반회계	4	319,16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	100,825
		소계	5	419,987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일반회계	10	669,01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	199,43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	90,650
		소계	13	959,092
	중소벤처기업부	일반회계	6	296,547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3	700,000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5	4,014,661
		소계	14	5,011,208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2	119,65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	55,644
		소계	3	175,294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2	29,70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	30,000
		고용보험기금	2	15,385
		임금채권보장기금	1	81,851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1	6,560
		근로복지진흥기금	2	47,832
		소계	9	211,334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3	3,473
		교통시설특별회계	5	147,71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	8,000
		주택도시기금	3	176,400
		소계	12	335,591
9개 상임위	14개 부처	합 계	93	12,156,488

자료: 기획재정부

❑ 추경안의 회계·기금별 구성을 살펴보면, 예산은 일반회계와 5개의 특별회계에서 6조 6,521억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은 11개의 기금에서 5조 5,043억원이 증액되어 총 12조 1,565억원이 증액됨.

이 중 일반회계가 5조 7,426억원(AI 컴퓨팅 자원 활용기반 강화 1조 6,194억원, 예비비 1조 4,000억원 등)으로 가장 큰 규모로 증가하였고, 다음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4조 147억원,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7,000억원 순으로 증액됨.

[2025년도 제1회 추경안의 회계 · 기금별 구성(총지출 기준)]

(단위: 개, 백만원)

회계 · 기금		세부사업수	증감규모	주요 증액내용
예산	일반회계	50	5,742,554	· AI컴퓨팅 자원 활용기반 강화 1조 6,194억원 · 예비비 1조 4,000억원 · 재난대책비(보조) 6,600억원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3	135,000	· 푸드서비스 선진화 650억원 · 농식품소비기반조성 500억원 · 수산업가치및소비촉진제고 200억원
	교통시설특별회계	5	147,718	· 도로유지보수 930억원 · 일반공항시설관리 224억원 · 항행안전시설운영및구축 209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1	199,430	·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 1,994억원
	환경개선특별회계	2	119,650	· 재해대책비 1,120억원 · 국립공원공단출연 77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8	307,797	· 임도시설 1,008억원 · 하수관로 정비 556억원 · 산업단지환경조성 511억원
	소 계	69	6,652,149	-

(단위: 개, 백만원)

회계・기금		세부사업수	증감규모	주요 증액내용
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3	74,680	· AI 혁신펀드 550억원 · AI산업육성 147억원 · 디지털전문・융합인재양성 50억원
	고용보험기금	2	15,385	· 고용유지지원금 111억원 ·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 43억원
	임금채권보장기금	1	81,851	· 대지급금지급 819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	1	10,000	·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R&D) 100억원
	산업재해보상보험 및예방기금	1	6,560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66억원
	중소벤처기업창업 및진흥기금	3	700,000	·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5,000억원 ·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1,000억원 · 통상 리스크 대응 긴급자금(융자) 1,000억원
	근로복지진흥기금	2	47,832	· 신용보증대위변제 330억원 · 생활안정자금(융자) 149억원
	복권기금	1	15,000	·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 15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2	361,970	· 지방채 인수(융자) 2,000억원 · 국고채이자상환 1,620억원
	주택도시기금	3	176,400	· 다가구매입임대(융자) 800억원 · 다가구매입임대출자 720억원 · 분양주택(융자) 244억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5	4,014,661	· 소상공인성장지원 1조 6,973억원 ·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 1조 4,345억원 · 소상공인지원(융자) 5,000억원
	소 계	24	5,504,339	-
합 계		93	12,156,488	-

자료: 기획재정부

❑ 한편,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일반회계·특별회계)과 함께 총 11개 기금에 관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이 중에서 「국가재정법」 제70조[1]에 따라 주요사업비(프로그램)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기존계획의 20%(금융성 기금은 30%)를 초과하여 의무적으로 국회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한 기금은 정보통신진흥기금·근로복지진흥기금·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4개임.

그 밖에 방송통신발전기금·임금채권보장기금 및 주택도시기금 등 6개 기금은 자체변경이 가능하지만 변경내용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함께 제출되었으며,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결과에 따라 회계·기금 간 재원이동의 연계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추경안 심의의 효율성 차원에서 함께 제출되었음.

---

1) 「국가재정법」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기금관리주체(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는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조정하여 마련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 이하
2.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3 이하. 다만,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소요되는 경상비에 해당하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10분의 2 이하로 한다.

2. 주요 검토사항

가. 추경안의 편성 요건

❑ 역대급 산불 피해,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제 위기, AI 등 첨단산업 관련 국제 경쟁 심화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추경안은 「국가재정법」상 편성요건에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산림청이 발표한 잠정 산불피해구역은 총 10만 3,876ha, 인명피해는 총 83명(사망 31명, 부상 52명)으로, 2000년 이후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6차례 중 이번 산불이 피해면적과 인명피해 모두 역대 가장 심각한 수준임.

[2000년 이후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산불 및 피해내역]

(단위: ha, 명)

산불명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산불 발생기간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피해내역	
			피해면적	인명피해 (사망자수)
동해안 산불 (강원 고성, 강릉, 동해, 삼척)	2000.4.7.~15.	2000.4.17.	23,794	17(2)
양양 산불 (강원 양양)	2005.4.4.~6.	2005.4.7.	973	-
강원 동해안 일원 산불 (강원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	2019.4.4.	2019.4.6.	2,832	3(2)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 (경북 울진, 삼척, 강원 강릉, 동해)	2022.3.4~13. 2022.3.5~8.	2022.3.6. 2022.3.8.	20,523	-
2023년 4월 산불 (경북 영주, 충남 금산, 당진, 보령, 부여, 대전 서구, 충북 옥천, 전남 순천, 함평, 강원 강릉)	2023.4.2.~4. 2023.4.11.	2023.4.5. 2023.4.12.	3,723	35(1)
경북・경남・울산 산불 (경남 산청, 하동, 경북 안동, 영덕, 영양, 의성, 청송, 울산 울주)	2025.3.21.~30.	2025.3.22./24./27.	103,876	83(31)

자료: 산림청 자료를 재작성

대내외적 불확실성은 한국의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대외적으로는 미국이 2025년 4월 5일부터 대부분의 국가에 대해 10%의 상호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철강·알루미늄 및 자동차에 대해서는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 중이며, 우리나라는 25%의 상호관세 적용이 4월 10일부터 90일간 유예된 상황임.

대내적으로는 물가안정, 금리인하 등으로 인해 2024년 하반기 이후 소비 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경제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이로 인해 OECD, IMF, 정부, 한국은행 등 주요 국제기구 및 국내기관 모두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였음.

[2025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조정 현황]

(단위: %, %p)

구분		조정 전(A)	조정 후(B)	조정치(B-A)
국제기구	OECD	2.1 (2024.12.)	1.5 (2025.3.)	△0.6
	IMF	2.0 (2025.1.)	1.0 (2025.4.)	△1.0
	ADB	2.0 (2024.12.)	1.5 (2025.4.)	△0.5
	AMRO	1.9 (2024.12.)	1.6 (2025.3.)	△0.3
정부 및 국내기관	정부	2.2 (2024.7.)	1.8 (2025.1.)	△0.4
	한국은행	1.9 (2024.11.)	1.5 (2025.2.)	△0.4
	국회예산정책처	2.2 (2024.10.)	1.5 (2025.4.)	△0.7
	KDI	2.0 (2024.11.)	1.6 (2025.2.)	△0.4

자료: 각 기관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리고, AI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국제 경쟁이 한층 격화되고 있음.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가 가속화되고, 기술활용 범위도 확대되면서, 주요국들이 수백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 유치를 발표하는 등 AI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국가재정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거나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등에 추경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2)]

이번 산불의 역대급 피해규모로 인해 신속한 복구가 절실한 상황이며, 내수 회복 지연, 미국의 관세정책 시행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확대,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국제 경쟁 심화 등 대내외 여건의 급격한 변화가 동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를 감안할 때 이번 추경안은 전반적으로 「국가재정법」상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여건상 즉시 사업 추진이 용이해 보이지 않고, 지원대상이 아직 불분명하거나 사업방식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국토교통부의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은 연례적으로 실집행이 저조하고, 신청 후 보조금 지급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며, '특별재생사업'은 특별재생계획 수립에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나 아직 피해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

행정안전부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 사업'은 추경안이 편성된 16개 사업 중 일부 사업이 2025년도 신규사업이거나 공사 착공 전 단계에 머물러 있어 면밀한 집행 관리가 필요함.

중소벤처기업부의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사업'은 지원대상이 '미국 관세 품목업종 영위 또는 대미 수출 중소기업'으로 다소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은 사업 추진체계 및 사업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부의 '방위각시설 개선 사업'은 추경안 편성 시 제시된 방식과 방위각시설 개선 TF를 통해 의견이 수렴된 방식 간에 차이가 있는 상황이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 사업'은 관세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출바우처에 대한 세부유형 재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나. 재정총량 변동 및 재정건전성

❑ 이번 추경안의 총수입은 본예산 대비 1.3조원이 증가한 652.8조원이며, 총지출은 본예산 대비 12.2조원 증가한 685.5조원임.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증가함에 따라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본예산 대비 적자 폭이 확대될 전망이며, 국가채무는 본예산 대비 6.0조원이 증가하겠음.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것으로 △32.6조원(GDP 대비 △1.2%) 적자입니다. 이는 본예산에 비해 적자 폭이 △10.9조원(GDP 대비 △0.4%p) 확대되는 것임.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험성기금 수지를 차감한 것으로 △84.7조원(GDP 대비 △3.2%) 적자입니다. 이는 본예산 대비 적자규모가 △10.9조원(GDP 대비 △0.4%p) 확대되는 것임.

국가채무는 1,279.4조원(GDP 대비 48.4%)으로 본예산 대비 6.0조원(0.2%p) 증가하였는데, 이는 이번 추경안의 재원 마련을 위한 국고채 8.1조원 추가 발행과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채무상환 등이 반영된 것에 기인함.

[2025년도 제1회 추경안에 따른 재정총량 변화]

(단위: 조원)

	2024년 본예산	2025년		B-A
		본예산(A)	추경(B)	
◇ 총수입 (증가율)	612.2 (△2.2)	651.6 (6.4)	652.8 (6.6)	1.3
◇ 총지출 (증가율)	656.6 (2.8)	673.3 (2.5)	685.5 (4.4)	12.2
■ 통합재정수지 (GDP대비,%)	△44.4 (△1.8)	△21.7 (△0.8)	△32.6 (△1.2)	△10.9 (△0.4%p)
■ 관리재정수지 (GDP대비,%)	△91.6 (△3.6)	△73.9 (△2.8)	△84.7 (△3.2)	△10.9 (△0.4%p)
■ 국가채무 (GDP대비,%)	1,195.8 (47.4)	1,273.3 (48.1)	1,279.4 (48.4)	6.0 (+0.2%p)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25.4.21.

❑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경제성장 둔화로 인해 국세수입 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확장적인 재정정책 운용 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겠음.

한국은행의 국민소득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021년에는 4.6% 증가하였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23년에는 1.4% 성장에 그쳤고, 2024년은 2.0% 성장할 것으로 잠정 전망되고 있음.[3)]

3) 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의 2025년 잠재성장률은 1.9%로 지난 전망(2024.10월)에 비해 0.2%p 하향조정하였음(2024년과 2025년의 실질GDP 성장률 실적치와 전망치가 기존 전망에 비해 하향조정되어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중장기적 추세가 반영되는 잠재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 (「2025년 NABO 경제전망」, 2025.3.)

국내총생산의 분기별 성장률을 보면, 2024년 1/4분기에 1.3% 성장하였지만, 2/4분기에 △0.2%로 역성장을 기록한 후 3/4분기와 4/4분기에는 각각 0.1%의 저조한 성장률을 보였으며, 2025년 1/4분기에 △0.2%로 다시 역성장을 기록한 상황임.

이와 같은 경제성장 둔화에 따라 이에 연동되는 국세수입 여건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 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겠음.

참고로, 이번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늘어나는 국가채무는 약 6.0조원이며, 모두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적자성 채무임.[4)]

[2025년도 제1회 추경안의 적자성 채무 및 금융성 채무 현황]

(단위: 조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	전망	결산	예산	추경안
□ 국가채무	1,126.7	1,195.8	1,195.1	1,175.2	1,273.3	1,279.4
ㅇ 적자성 채무	726.4	792.3	802.0	815.4	879.5	899.6
(비중, %)	(64.5)	(66.3)	(67.1)	(69.4)	(69.1)	(70.3)
ㅇ 금융성 채무	400.3	403.5	393.0	359.8	393.9	379.8
(비중, %)	(35.5)	(33.7)	(32.9)	(30.6)	(30.9)	(29.7)

자료: 기획재정부

4) 적자성 채무는 국가채무에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하여 향후 조세 등을 재원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로서, 일반회계 적자보전 국채, 공적자금 국채전환이 대표적임. 금융성 채무는 외환·융자금 등 대응자산이 있어 채무상환을 위한 추가적 재원조성 없이 자체상환이 가능한 채무로서,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서민주거 안정용 국채 등이 해당함.

❑ 정부가 추경안이 재정총량에 미치는 영향을 당해연도 이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2020년 이후 추경안 편성 시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음.

추경안에 향후 총수입이나 총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존재하는바, 정부는 추경안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관리방안을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 제7조제8항[5]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을 보면, 총수입과 총지출은 2025년에만 일시적으로 1.3조원, 12.2조원이 각각 증가하고,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 관리재정수지도 각각 2025년에만 일시적으로 △10.9조원만큼 악화되는 등 이번 추경안이 한시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음.

[추경안이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미치는 영향(요약)]

(단위: 조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총수입 변동	-	1.3	-	-	-
총지출 변동	-	12.2	-	-	-
통합재정수지 변동	-	△10.9	-	-	-
관리재정수지 변동	-	△10.9	-	-	-
국가채무 변동	-	6.0	2.3	2.3	2.3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25.4.21. 바탕으로 재작성

5)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및 제89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될 때에는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그 관리방안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총수입 중 한국은행 잉여금, 세계잉여금의 경우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결과이므로 2025년에 한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지방채 이자수입의 경우 당해연도 수입으로 그치지 않고, 장기로 융자해 주는 것과 동일하므로 향후 총수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

또한, 총지출의 경우에도 8.1조원 규모의 국고채를 추가로 발행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이자상환액 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통상·AI, 소상공인 지원 등 12.2조원의 정부지출 증가에 따라 2026년 이후 총수입이나 총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존재할 것으로 보이나, 정부는 이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변화요인으로 추계하지 않고 있음.

다. 재정총량 변동 및 재정건전성

❑ 이번 추경안의 총지출은 국채 발행 8.1조원(66.6%), 한국은행 잉여금 1.2조원(10.3%), 기금 여유자금 등 2.6조원(21.3%) 등으로 충당할 계획임.

[2025년도 제1회 추경안의 재원]

(단위: 백만원, %)

항 목		재원 규모	비 중
국채 발행		8,098,499	66.6
각종 결산상잉여금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218,439	1.8
	한국은행 잉여금	1,249,098	10.3
기금 여유자금 등주)		2,590,452	21.3
합계		12,156,488	100.0

주)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채 이자수입 40억원 포함
자료: 기획재정부

❑ 국채 발행의 경우, 전년 대비 국고채 발행 규모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고채를 추가로 발행하게 되는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가채무의 추가 증가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겠음.

정부는 한국은행 잉여금, 일반회계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채 추가 발행규모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추경의 취지를 감안할 때 각종 잉여금 · 여유재원 등 상대적으로 건전한 재원 외의 부족분을 국채로 충당하는 것은 다소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연도별 국고채 발행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총 발행규모는 180.5

조원으로 순증 규모는 120.6조원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4년에는 총 발행규모가 158.4조원(△12.2%)까지 감소하였고, 순증 규모도 49.9조원(△58.6%)으로 감소하였음.

그러나 2025년 국고채 발행계획은 총 197.6조원으로, 전년 대비 39.2조원(24.7%) 증가하였으며, 순증 규모 또한 80.0조원으로 전년 대비 30.1조원(60.3%) 증가할 전망임.

[2021~2025년 연도별 국고채 발행규모]

(단위: 조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A)	2025년(B)	(B-A)
◇ 총발행		180.5	168.6	165.7	158.4	197.6	39.2
ㅇ **순 증**		**120.6**	**97.3**	**61.5**	**49.9**	**80.0**	**30.1**
○ 차 환		59.9	71.4	104.2	108.5	117.5	9.0
	만기상환	45.4	56.2	86.0	85.7	94.0	8.3
	조기상환	14.5	15.2	18.2	22.8	23.5	0.7

주) 2025년은 발행계획

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도 국고채 발행계획 및 제도개선 방안」, 2024.12.30.

❑ 다음으로 기금 여유재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건전한 재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수익 창출의 기회비용을 감안하면 국채와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이번 추경안은 복권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등 9개의 기금에서 1조 8,865억원 규모의 여유재원을 활용할 예정이며, 중소벤처기업창업 및진흥기금에서는 7,000억원의 중소기업진흥채권을 발행하여 해당 기금 사업비로 활용할 예정임.

이번 추경안의 기금 여유재원은 해당 기금의 고유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고, 공자기금으로 예탁하여 일반재원으로 사용하는 재원은 없는 것으로 보임.

[2025년도 제1회 추경안의 재원 중 기금 여유자금 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규모	비고
복권기금	15,000	해당 기금 사업 증액
정보통신진흥기금	1,494	
방송통신발전기금	200	
고용보험기금	15,385	
임금채권보장기금	81,851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6,560	
근로복지진흥기금	47,832	
주택도시기금	176,400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1,541,730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700,000	중소기업진흥채권 발행
합계	2,586,452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정부는 한국은행 잉여금,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재원 등에 대해 국채발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전한 재원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그러나, 기금 여유재원은 통상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금이므로, 기회비용 측면에서는 국채발행과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음.

❑ 다음으로 한국은행 잉여금의 경우, 10월까지의 한국은행 당기순이익 예측치를 다음연도 세입예산안에 반영하는 등 세입예산과 실제 수납액의 오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2024회계연도 한국은행의 세후 당기순이익은 7조 8,189억 2,600만원으로, 한국은행은 이 중 30%인 2조 3,456억 7,800만원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에 24억 1,700만원을 출연한 후 남은 금액 5조 4,491억 100만원을 정부 세입으로 납부하였는데, 이는 당초 2025년 예산액보다 1조 2,490억 9,800만원 초과한 금액임.6)

[2025년도 한국은행 잉여금 추경안]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A)	추경안(B)	증감(B-A)	(B-A)/A
한국은행 잉여금	1,630,000	4,200,003	5,449,101	1,249,098	29.7

세입예산과 실제 수납액의 차이에 대해 정부는 한국은행 잉여금 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7월 초까지의 실적을 반영하여 세입예산을 추계하고 있으나, 한국은행의 수지는 외화자산운용에 따른 이자, 매매손익 등으로 구성되어 국내외 금리 및 주가, 환율 등 금융환경 변화와 외화자산 운용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전 예측이 곤란한 특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6)「한국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이익금처분) ①한국은행은 법 제9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순이익금을 매 회계연도 경과후 2월이내에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하여야한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7]에 따라 매월 대차대조표를 공개하고 있고, 국회의 다음연도 예산안 통과는 통상 12월에 이루어지므로 적어도 10월까지의 당기순이익 예측치를 다음연도 세입예산안에 반영함으로써 세입예산과 실제 수납액의 오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정부는 이번 추경안의 재원 마련을 위해 지출구조조정을 시행하지 않았는바,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지출구조조정은 시행하지 않았는바, 이는 추경안의 편성 시점(4월)이 본예산이 집행된 지 3개월 여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으로 연도 내 집행부진 예상 사업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8]

정부가 1998년 이후 제출한 총 30회의 추경안 중 지출구조조정을 재원으로 활용한 것은 7차례뿐이었으나, 이러한 지출구조조정은 국채 추가발행을 최소화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7) 「한국은행법」
제101조(대차대조표의 공고) ① 한국은행은 매월 20일 이내에 전월의 최종영업일 현재의 자산 및 부채를 일정한 항목으로 표시하는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 회계연도 최종영업일 현재의 대차대조표는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공고할 수 있다.

8) 정부 1분기 신속집행 결과 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집행액은 전년 동기대비 4.2조원 증가한 232.6조원(잠정)

[추경안 지출구조조정 연혁]

(단위: 조원, %)

구분		추경안 규모	지출구조조정 규모		국채발행 규모
				추경안 대비 비중	
1998년도	제1회	12.5	8.5	68.0	-
	제2회	11.5	0.7	6.1	7.9
2003년도	제2회	4.2	0.3	7.1	-
2013년도	제1회	17.3	0.3	1.7	15.8
2020년도	제2회	7.6	4.3	56.6	-
	제3회	35.3	4.0	11.3	23.8
2022년도	제2회	59.4	7.0	11.8	-

주) 2020년도 제2회 및 제3회 추경안의 지출구조조정 규모는 당초 정부 발표 기준으로는 6.4조원, 10.1조원이었으나, 이는 사실상 기금 여유재원 조정 성격의 재원이 포함되어 있어 국회 등의 지적이 있었기에 국회 · 정부 모두 향후 상기 금액(4.3조원, 4.0조원)을 기준으로 통계를 관리할 예정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각 년도 · 회차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바탕으로 재구성

라. 추경안 규모의 적정성

❑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0.1%p 정도의 경제성장률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9)]

이번 추경안이 적정한 규모인지에 대해 경제 전문기관들은 다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바,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를 참고하여 현 경제 상황, 추경의 경제적 효과 및 재정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이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한국은행 총재는 2025년 1월 경제성장률을 0.2%p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15조원 내지 20조원 규모 추경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2025년 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를 재확인하였음.[10)] 또한, 이번 12.2조원 추경안에 대하여 경제성장률 0.1%p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음.[11)]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2025년 3월 자체 분석한 2025년 경제성장률

---

9) 기재부 차관은 추경 브리핑(2025년 4월 17일)에서 순수하게 경기 진작을 목적으로 했다면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을 비롯해 (승수효과가 높은) 정부소비와 투자 위주로 편성했을 것이나 이번 추경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함.

10) 한국은행 총재는 현 상황에서 통화정책만으로 경기하락을 막기 어려워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그 규모는 15조 내지 20조원이 적절하며, 재정건전성 및 차기년도 경제성장율에 미치는 영향(지속적인 재정지원 필요 여부) 등을 고려할 때 20조원을 넘을 경우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밝힘. - 제422회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2025.2.18.)

11) 2025년 3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학술지 『경제분석』에 정부지출승수를 1.45 로 분석한 논문(김세훈·허준영,「정부지출의 GDP 효과 분석 : 비근본 문제 해결을 위한 다변수 VAR 모형 접근」)이 게재되었고, 이를 기초로 10조원 규모의 추경이 경제성장률을 0.5%p 올릴 수 있다고 예측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으나, 한국은행 총재는 2025년 4월 17일 금융통화위원회 후 기자간담회에서 1.45는 너무 높고, 정부지출승수를 0.4~0.5로 보고 있다며 12조원 추경안의 효과를 0.1%p 상승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힘.

전망치(1.7%)와 재정승수(0.698)를 기초로 잠재성장률(2.0%) 수준의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약 9.8조원 규모 세출 증액 및 세수결손 보전을 위해 약 8.3조원 규모의 세입경정(총 18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임.[12)]

반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5년 2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로 하향조정하면서도 추경보다는 기존예산 조기집행과 통화정책을 통한 대응을 강조하였고, 2025년 3월 30일 정부가 10조원 추경 추진방침을 밝힌 후에는 재정 여력과 경제 파급효과를 고려해 추경을 제한적·선택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13)]

[추경 적정 규모에 관한 주요 기관 의견]

기관	적정 규모	출처(시점)
한국은행	15조 내지 20조원 (성장률 0.2%p 제고)	기자간담회(2025년 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2025년 2월)
현대경제연구원	세출증액 9.8조원, 세입경정 8.3조원 (성장률 0.3% 제고)	2025년 3월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제한적・선택적 (예산 조기집행 및 통화정책이 바람직)	2025년 4월 세미나

12) 현대경제연구원, 「재난 극복과 경기 침체 방어를 위한 추경이 시급하다 - 잠재성장률 수준 복귀를 위해 최소 9.8조원 필요」(『경제주평 25-05(통권 984호)』), 2025.3.26.
13) 「(제24차 경제산업포럼) 트럼프 2.0 시대, 한국경제의 전망과 대책」세미나 (2025.4.9.)에서의 한국개발연구원장 발언

마. 2025년도 예산 집행계획 및 1분기 집행실적

❑ 정부는 내수회복 지연에 따른 민생지원을 위하여 2025년 상반기에 강도 높은 정부재정의 신속 집행을 추진하였으나, 내수감소 및 수출부진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2025년 신속집행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중앙·지방재정의 신속집행 연간계획액을 562조 5,000억원으로 설정하였고, 상반기 집행 목표액을 358조원(63.6%)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민생회복 및 경기활성화와 직결된 사업을 중점관리사업으로 지정하여 총 85조원의 예산액 중 34조원(40%)을 1분기 집행 목표액으로 설정하였음.

[2021년 ~ 2025년 집행계획 비교]

(단위 : 조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추진배경		코로나 피해 대응 및 경기회복	코로나 피해 대응 및 민생안정	경기 둔화 대응 및 민생안정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대응	내수 부진 및 수출 둔화 대응
신속집행 연간계획		557.8	456.2	482.5	560.9	562.5
	상반기	345.5(62%)	281.8(61.7%)	303.8(63%)	350.4(62.5%)	358(**63.6%**)
중점관리사업		67.8	107	31.5	109.1	85
	상반기	44.9(66%)	-	-	71.2(65%)	59.5(**70%**)
	1분기	23.3(34.3%)	-	-	-	34(**40%**)
공공기관 투자		65	67	63.3	63.4	66
	상반기	34.45(53%)	35.5(53%)	34.8(55%)	34.9(55%)	37.6(**57%**)
민간투자		3.5	-	-	5.7	5.2
	상반기	1.8(51.5%)	-	-	2.7(47.3%)	2.8(**54%**)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중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재정집행계획, 공공기관 투자계획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정부가 2025년 4월 발표한 1분기 집행실적을 보면, 1분기 재정의 신속집행 달성액은 약 211.7조원(연간 목표 대비 38.4%)으로 2024년 1분기 집행실적인 207.9조원보다 3.8조원 증가하였음.

[2025년 1분기 집행실적]

(단위: 조원)

구 분	2024년			2025년			증감 (b-a)
	목표		1분기 집행실적 (a)	목표		1분기 집행실적 (b)	
	연간	상반기		연간	상반기		
재 정	549.5	343.0	207.9	551.1	349.9	211.7	+3.8
중 앙	240.6	156.4	100.3	241.1	161.1	100.6	+0.3
지 방	282.5	169.5	95.9	283.5	171.5	101.6	+5.7
지방교육	26.4	17.2	11.7	26.6	17.3	9.5	△2.3
공공기관	63.5	34.9	19.0	66.0	37.6	19.5	+0.5
민간투자	5.7	2.7	1.5	5.2	2.8	1.4	△0.1
합 계	618.7	380.6	228.4	622.3	390.3	232.6	+4.2

주) 당초 재정 신속집행 상반기 목표는 359.8조원 이었으나,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사업이 은행 등 민간재원을 우선 활용(국토부)하기로 함에 따라 신속집행 관리대상에서 제외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제11차 재정집행 점검회의」 관련 보도자료)에서 발췌

중점관리사업의 1분기 집행액은 32.8조원으로 당초 계획한 잠정 목표액(34조원)에 미달하였으나 수정계획 기준 목표액인 28.6조원(40%)보다 4.2조원 초과달성하였음.

[2025년 1분기 중점관리사업 집행실적]

(단위: 조원, %)

구 분	예산현액		1분기 집행목표		1분기 집행실적				
						집행률		진도율	
	원계획 (a)	수정 (b)	원계획 (c)	수정 (d)	집행액 (e)	원계획 (e/a)	수정 (e/b)	원계획 (e/c)	수정 (e/d)
민생경제	45.2	31.2	17.5	12.4	15.6	34.5	50.0	89.1	125.8
경기진작	28.2	28.3	12.4	12.1	12.8	45.4	45.2	103.2	105.8
기타	11.6	12.1	4.1	4.1	4.4	37.9	36.4	107.3	107.3
합 계	85	71.6	**34.0**	**28.6**	**32.8**	38.6	**45.9**	96.5	114.7

주) 원계획은 「2025년 신속집행 추진계획」을 통해 발표된 값이고, 수정은 이후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사업이 은행 등 민간재원을 우선 활용(국토부)하기로 함에 따라 신속집행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조정된 값임

자료: 기획재정부

❑ 다만, 정부재정의 1분기 신속집행이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임.

먼저, 우리나라의 건설기성[14]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1월 9조 7,949억원에서 2월 9조 9,423억만원으로 1,474억원(1.5%)이 증가하였으나, 2024년 2월 12조 6,909억원에 비해 21.6% 감소하여 건설투자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월별 건설기성 추이]

(단위 : 백만원)

시점	2024.2	2024.8	2024.9	2024.10	2024.11	2024.12	2025.1	2025.2
건설기성	12,690,942	11,072,897	10,850,917	10,800,459	10,462,386	10,270,446	9,794,877	9,942,305

주) 건설기성은 불변_계절조정 값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통계청

14) 건설업체의 실제 시공실적을 금액으로 평가한 것으로, 공사대금의 청구나 수취여부와는 무관하며 공사비 중 지가를 제외하고 발주자공급원자재비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임.

우리나라의 소비자심리지수[15]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12월 88.2로 전월대비 12.5 급감한 이후 2025년 1월 91.2, 2월 95.2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3월에 93.4로 다시 감소하여 소비심리 위축이 지속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임.

[월별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시점	2024.6	2024.7	2024.8	2024.9	2024.10	2024.11	2024.12	2025.1	2025.2	2025.3
지표	100.9	103.7	100.8	100.0	101.8	100.7	88.2	91.2	95.2	93.4
전월비	2.5	2.8	△2.9	△0.8	1.8	△1.1	△12.5	3.0	4.0	△1.8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우리나라의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3월 기준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수출액 증가율(3.1%)이 2024년 3월의 전년 동기 대비 수출액 증가율(3%)보다 높아 수출 증가세가 회복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2025년 1분기 기준 수출액(1,599억달러)은 2024년 1분기 기준 수출액(1,633억달러)보다 2.1% 낮아 수출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연도별 1분기 수출 추이]

(단위 : 억달러, %)

시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분기	3월	1분기	3월	1분기	3월	1분기	3월	1분기	3월
수출액	1464	536.9	1734	637.8	1512	548.8	1633	565.1	1599	582.8
전년 동기비	12.5	16.3	18.4	18.8	△12.8	△14	8	3	△2.1	3.1

자료: 관세청 통계자료 및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15) 경제지표와의 상관성 및 선행성이 우수한 6개 주요구성지수(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를 합성한 지수

3. 유형별 검토

가. 재해·재난 대응

❑ 정부는 재해·재난 대응을 위해 본예산 대비 3.2조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에 1.4조원, 재해·재난 예방·대응력 강화에 1.7조원, 노후 SOC 개량 등 안전투자에 0.2조원을 지원할 계획임.

구체적으로는 총 7개 부처 27개 사업이 편성되었으며, 이번 산불 피해지역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부처 재해·재난대책비 부족분 9,460억원을 보강하였고, 지방재정 지원을 위해 지방채 인수예산 2,000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를 1.4조원 증액 편성하였음.

[2025년도 추경안 재해·재난 대응 관련 사업 개요]

(단위: 억원)

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 (A)	추경안 (B)	증감액 (B-A)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건설 및 지하안전관리	20	17	30	14
		건축안전	81	94	106	12
		국토안전관리원출연	843	860	869	9
	교통시설 특별회계	1229여객기사고 피해 지원	-	-	14	14
		드론안전및활성화지원	233	223	323	100
		일반공항시설관리	4	3	227	224
		항행안전시설운영및구축	350	442	651	209
		도로유지보수	8,378	8,665	9,595	930
	지역균형 발전특별회계	도시재생사업	4,295	4,729	4,809	80
	주택도시기금	다가구매입임대(융자)	46,370	30,444	31,244	800
		다가구매입임대출자	24,343	2,731	3,451	720

(단위: 억원)

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추경안 (B)	2025년도 증감액 (B-A)
		분양주택(융자)	20,153	14,716	14,960	244
소계			105,071	62,925	66,280	3,356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예비비	42,000	24,000	38,000	14,000
	공공자금 관리기금	지방채 인수(융자)	26,000	100	2,100	2,000
소계			68,000	24,100	40,100	16,000
산림청	일반회계	산림재해대책비	1,000	1,000	2,740	1,740
		산림헬기 도입·운영	1,123	939	1,925	987
		산불방지대책	624	579	927	348
		대형산불 대응 지능형 솔루션 기술개발(R&D)	-	-	117	117
	지역균형 발전특별회계	임도시설(지원)	1,828	1,900	2,909	1,008
소계			4,576	4,418	8,618	4,200
소방청	일반회계	화재안전 및 설비기준개발	9	10	62	51
		중앙119특수구조대지원	499	374	396	22
소계			508	384	458	74
환경부	환경개선 특별회계	재해대책비	500	500	1,620	1,120
		국립공원공단 출연	2,295	2,227	2,304	77
	지역균형 발전특별회계	하수관로 정비	12,816	16,264	16,821	556
소계			15,611	18,991	20,744	1,753
해양수산부	일반회계	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	18	22	83	62
소계			18	22	83	62
행정안전부	일반회계	재난대책비(보조)	6,000	3,600	10,200	6,600
	지역균형 발전특별회계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8,697	8,742	8,918	177
소계			14,697	12,342	19,119	6,777
7개 부처		**27개 사업**	**208,482**	**123,181**	**155,402**	**32,221**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재구성

❑ 첫째, 정부는 피해 규모에 대한 정확한 추계 및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한 상황에서 추경안을 편성한 측면이 있으므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등 선행절차를 보다 신속히 이행할 필요가 있겠음.

행정안전부의 '재난대책비 지원' 사업은 피해 규모에 대한 집계가 진행 중인 이유로 소상공인 생계비 지원 213억원, 공공시설 복구비 2,664억 5,000만원 및 파손주택 철거비 436억 5,000만원 등의 세부 산출내역이 미정인 상황임.

국토교통부의 '지반탐사 지원' 내역사업은 지반침하 위험구간에 대한 지반탐사 용역비를 지자체에 지원하기 위해 13억 6,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나, 굴착공사현장 주변, 노후하수관로 매설 지역, 지하수위 급변 지역, 상습침수지역이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역 등 데이터나 시스템에 기반하여 선별된 고위험지역과 무관하게 지자체 수요에만 근거하여 사업대상을 선정하였음.

또한, 국토교통부의 '특별재생사업'은 대규모 산불 피해지역에 특별재생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특별재생지역 지정을 위한 피해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곳을 지정하여 40억원씩 총 8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경안이 편성된 상황임.

환경부의 '재해대책비' 사업은 재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조사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합동조사 후 피해복구 계획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예산이 교부되는 구조이나, 이번 추경안을 통한

증액분 1,120억원은 아직 피해복구 계획이 미확정된 상황이므로 조속한 피해복구 계획 수립이 필요함.

❑ 둘째, 기존 사업의 집행이 미진한 상황에서 추경안으로 증액 편성되거나, 2026년 이후 집행 계획이 있는 사업의 예산이 이번 추경안을 통해 전액 편성된 경우에는 연내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보다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해 보임.

행정안전부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 내역사업은 산불간접피해지역 5개소 및 긴급정비필요지구 11개소의 정비를 위한 설계비·공사비 176억 7,800만원이 추경안을 통해 편성되었으나, 그 중 14개 사업지구의 사업기간이 2026년 6월까지로 예정되어 있고, 일부 사업지구는 2025년에 신규로 사업지구로 선정되었거나 공사 착공 전 단계에 머물러 있으므로 면밀한 집행관리가 필요함.

국토교통부의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은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실시하기 위해 추경안에 1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실집행률을 살펴보면 2022년 19.0%, 2023년 7.8%, 2024년 29.0%, 2025년은 4월 기준 2.2%에 불과하고, 신청접수부터 공사시행 후 보조금 지급까지 일정 기간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토교통부의 '다가구매입임대 출자·융자' 사업은 신축 매입임대의 경우 매입공고에서 계약체결까지 1~3년이 소요됨에 따라 기존에는 3년으로 분할 편성하였는데, 이번 추경안에는 매입임대

1,000호의 공급에 필요한 공사비 전액이 편성되었으므로 적극적인 연내 집행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산림청의 '산림재해대책비' 사업은 산림재난피해지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1,74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330-03)로 지원하는 재원의 평균 실집행률이 64.5%로 다소 부진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 산림재난피해 복구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음.

소방청의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 개발' 및 '중앙119특수구조대지원' 사업은 과거 지방비 미확보나 계약 후 도입까지 기간 소요 등을 사유로 당초 계획 대비 집행이 지연되었는바,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연내 집행하여 도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집행 및 계약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정부는 재해·재난 대비 등을 위해 예비비를 1조 4,000억원 증액 편성하였는바, 산불 피해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고, 부처별 재해·재난대책비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최근 예비비 집행실적이 다소 저조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예비비의 적정 증액 규모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정부는 산불 추가 복구,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등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추경안에서 목적예비비 1조원, 일반예비비 4,000억원 등 본예산 대비 예비비 1조 4,000억원을 증액 편성하면서, 이와 동시에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6,600억원, 환경비 재해대책비 1,120억원 및

산림청 산림재해대책비 1,74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아직 산불 피해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정확한 피해규모 산정이 되어야 복구 규모가 확정된다는 점과 2023년 28.5%, 2024년 39.0% 등 코로나19 이후 최근 예비비 집행실적이 저조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예비비의 적정한 증액 규모에 대해 국회 심의 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나. 통상·AI 지원

❑ 정부는 통상·AI 지원을 위해 본예산 대비 4.4조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통상 리스크 대응을 위해 2.1조원, AI 생태계 혁신 사업 투자에 1.8조원,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0.5조원을 투자할 예정임.

구체적으로는 6개 부처 48개 사업이 편성되었으며, 관세부과로 인한 피해기업과 수출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자금공급을 위해 1.5조원을 편성하였고, 국내 AI 생태계 혁신을 위해 고성능 GPU 1만장 확보를 위한 1.5조원과 석박사급 이상의 고급인재 1,650명을 추가로 양성하기 위한 예산 등을 편성하였음.

[2025년도 추경안 통상·AI 대응 관련 사업 개요]

(단위: 억원)

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 (A)	추경안 (B)	증감액 (B-A)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	1,000	3,000	2,000
소계			-	1,000	3,000	2,000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기업구조혁신펀드)	500	-	500	500
		산업은행 출자 (반도체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	-	2,500	4,500	2,000
		산업은행 출자 (관세대응저리지원 특별프로그램)	-	-	1,000	1,000
소계			500	2,500	6,000	3,500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투자유치기반조성	3,579	3,642	4,038	396
		산업단지환경조성	3,972	3,314	3,825	511
	에너지및자원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	2,518	2,007	4,001	1,994

(단위: 억원)

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 (A)	2025년도 추경안 (B)	2025년도 증감액 (B-A)
	사업특별회계	(비축출자)				
	일반회계	무역보험기금 출연	450	800	3,800	3,000
		친환경차 보급촉진 이차보전	25	55	75	20
		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	60	51	125	74
		통상기반조성 및 역량강화	23	31	50	19
		소부장공급망 안정종합지원사업	19	45	905	860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지원	-	-	626	626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기반시설구축지원	-	252	1,422	1,170
		팹리스기업첨단장비 공동이용지원	-	72	95	23
		반도체아카데미구축	43	47	57	10
		수출지원기반활용	864	914	1,802	888
소계			11,553	11,230	20,821	9,591
중소벤처기업부	일반회계	수출지원기반활용	1,119	1,276	2,174	898
		기술보증기금출연	200	400	1,100	700
		신용보증기금출연	800	-	1,000	1,000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	4,232	5,680	5,780	100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	915	821	921	100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2,191	2,361	2,528	167
	중소벤처기업 진흥기금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1,500	2,500	7,500	5,000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1,894	3,825	4,825	1,000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한시, 융자)	-	-	1,000	1,000
소계			12,851	16,863	26,828	9,965
고용노동부	지역균형 발전특별회계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	1,062	1,079	1,379	300
	고용보험기금	고용유지지원금	714	703	814	111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 (폴리텍)	552	577	620	43
	일반회계	청년일자리창출지원	6,577	7,772	8,026	254
		중장년 인턴제	-	36	79	43
소계			8,905	10,167	10,918	751
과학기술	일반회계	AI컴퓨팅 자원	-	-	16,194	16,194

(단위: 억원)

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 (A)	추경안 (B)	증감액 (B-A)
정보통신부		활용 기반 강화				
		AI 반도체 실증 지원	188	244	644	400
		World Best LLM 데이터 활용 지원	-	-	300	300
		한국과학기술원 연구 운영비 지원(R&D)	2,073	2,184	2,334	150
		AI챔피언 프로젝트 지원(R&D)	-	-	100	100
		울산과학기술원 연구 운영비 지원(R&D)	860	902	977	75
		융합서비스 글로벌시장 진출지원	78	173	227	54
		최고급AI해외인재유치지원 (R&D)	-	-	50	50
		광주과학기술원 연구 운영비 지원(R&D)	935	976	1014	38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 운영비 지원(R&D)	898	977	1014	37
		생성AI선도인재양성(R&D)	35	52	87	35
		AI스타펠로우십지원(R&D)	-	60	90	3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연구개발특구육성(R&D)	1,003	1,061	1,111	50
	정보통신 진흥기금	AI 혁신펀드	-	450	1,000	550
		AI산업육성	-	767	914	147
		디지털전문·융합인재양성	819	508	558	50
	방송통신 발전기금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 (R&D)	1,054	1,304	1,404	100
소계			7,943	9,658	28,018	18,360
6개 부처		**48개 사업**	**41,752**	**51,418**	**95,585**	**44,167**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재가공

❑ 첫째, 일부 사업의 경우 정책지원 대상이 광범위하거나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어 정책효과 저하가 우려되므로, 정책지원 대상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용보증기금 출연' 사업은 무역분쟁 및 산업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내 위기대응 특례보증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으나, 실제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대상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의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사업은 정책자금 기준금리보다 0.3%p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많은 자금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타 사업과 비교했을때 지원대상이 '미국 관세 품목 업종 영위 또는 대미 수출 중소기업'으로 구체성이 다소 부족하므로 실제 사업 수행 시 개선할 필요가 있음.

금융위원회의 '산업은행 출자(관세대응저리지원특별프로그램)' 사업은 미국의 품목별 관세 부과 등으로 인하여 생산·수출 위축이 우려되는 대미 수출비중이 큰 주요산업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나, 지원대상이 광범위하므로 저리대출 지원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한정된 저리대출 공급액이 필요한 기업에게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정책펀드 조성 사업은 기존 정책펀드가 투자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신규 펀드 조성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연내 자

펀드 결성을 통하여 실질적인 투자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겠음.

금융위원회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기업구조혁신펀드)' 사업은 제4·5차 기업구조혁신펀드의 미투자액(총 2조 1,256억원)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안을 통해 제6차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신규 조성하려는 것으로 선제적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신규 펀드조성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신규 펀드를 조성하는 경우 제4·5차의 사례보다 일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내년 연초부터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혁신펀드' 사업은 AI 및 SaaS 분야 유망기업의 발굴·육성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추경안을 편성하려는 것이므로, 시행사 선정 이후 3개월 이내에 자펀드가 결성되어 연내에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집공고 시기를 당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다. 민생 지원

❑ 정부는 민생 지원을 위해 본예산 대비 4.3조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2.6조원, 영세·중소 사업자 매출기반 확대를 위해 1.6조원,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0.2조원을 지원할 계획임.

구체적으로는 7개 부처 15개 사업이 편성되었으며, 소상공인 대상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및 정책자금 2.5조원을 확충하였고, 전통시장·골목상권 등의 매출 신장을 위한 상생페이백 1.4조원을 반영하였으며, 저소득 근로자, 최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정책자금 확대를 위해 0.2조원을 편성하였음.

[2025년도 추경안 민생 지원 관련 사업 개요]

(단위: 억원)

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 (A)	추경안 (B)	증감액 (B-A)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1,254	2,110	5,444	3,334
		소상공인성장지원	2,925	2,651	19,624	16,973
		소상공인재기지원	1,663	2,748	3,242	494
		소상공인지원(융자)	37,100	37,700	42,700	5,000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	4,228	4,652	18,997	14,345
소계			47,170	49,861	90,007	40,146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푸드서비스선진화	26	19	669	650
		농식품소비기반조성	1,236	1,234	1,734	500
소계			1,262	1,253	2,403	1,150
해양수산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수산업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1,363	1,017	1,217	200
소계			1,363	1,017	1,217	200
과학기술	일반회계	배터리프리 키오스크 기술개발	-	-	92	92

(단위: 억원)

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 (A)	추경안 (B)	증감액 (B-A)
정보통신부		및 보급지원(정보화)				
소계			-	-	92	92
고용노동부	임금채권보장기금	대지급금지급	4,747	5,293	6,112	819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143	143	209	66
	근로복지진흥기금	생활안정자금(융자)	885	915	1,064	149
		신용보증대위변제	302	317	647	330
소계			6,077	6,668	8,032	1,364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	150	306	456	150
소계			150	306	456	150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최저신용자 한시특례보증)	560	560	925	365
소계			560	560	925	365
7개 부처		15개 사업	56,582	59,665	103,132	43,467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재가공

❑ 첫째,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1조 5,600억원) 및 ‘상생페이백’ (1조 3,700억원) 사업은 지원대상이 광범위하여 관련 부처·공공기관·민간금융회사와의 긴밀한 사전준비가 필요해 보이고, 관련하여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임.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사업은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311만 1,000명에게 공공요금 등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원 상당의 카드를 발급·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주의 방식에 따라 행정비용이 크게 발생하거나 신청률이 예상보다 낮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 지원의 법적 근거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 및 세부지침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페이백’ 사업은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점포에서 카드로 결제한 경우 20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 대비 증가분의 일부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사업으로, 사업 준비 및 집행 과정에서 상당한 행정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2개 사업은 모두 대규모 정책대상자를 대상으로 신청·검증·등록·정산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민간 금융기관 등과의 면밀한 업무 연계가 필요한데, 사전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계약 준비 및 체결절차를 거쳐 연내 지원사업 개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겠음.

❑ 둘째,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 확대에 따라 대위 변제액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대위변제 후 구상채권 회수율 제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고용노동부의 ‘신용보증대위변제’ 사업은 추경안에서 동 사업으로 신용보증을 받는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148억 8,000만원,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65억 6,0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향후 신용보증잔액 증가에 따른 대위변제액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므로 대위변제 후 회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Ⅳ.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Ⅴ.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심사보고자 : 허 영 위원)

1. 심사경과

❑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1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음.

❑ 먼저, 심사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소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친 회의와, 보류 안건 등의 심사를 위한 간사 간 협의 및 부대의견 협의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였음.

2. 심사보고 요지

❑ 우리 위원회의 심사에 따른 총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12조 1,565억원의 추경안에 대해 1조 8,843억원을 증액하고, 2,639억원을 감액하여 총 1조 6,205억원이 증액 되었음.

❑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방지대책 사업 88억원, 산림헬기 도입·운영 사업 50억원을 증액하고, 산

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을 위해 100억원을 증액하였음

❑ 둘째, 여름철 수해를 대비하기 위해 국가하천 정비 관련 225억원을 증액하고, 하수관로 정비 관련 287억원을 증액하였음.

❑ 셋째, 민생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 및 지역화폐의 발행지원에 필요한 관련 예산 4,000억원을 증액하였음.

❑ 넷째, 물가안정 및 농수산물의 소비 진작을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700억원과 수산물 할인지원 300억원을 증액하였음.

❑ 다섯째, 마약·딥페이크·성범죄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 사업 37억원 등을 증액하였음.

❑ 다음 부대의견은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경남·울산의 산불 피해에 대해 주택전파 피해자에 대한 주거비 총지원금을 최소 1억원 이상 지원하고, 피해 농가 생계비를 최대 12개월로 확대하며, 공장·상가 철거·복구 신규 지원과 농기계에 대한 정부 지원율 상향 등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는 등 총 1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음.

❑ 이러한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중소벤처기업 및 창업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7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각각

수정 의결하였음.

그리고 복권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4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 의결하였음.

❑ 이번 추경예산이 신속하게 지원되어 산불피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경기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 등 국민 여러분들께 적기에 지원되어 보탬이 되기를 바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우리 추경안등조정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람.

3.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내용

원안 가결

Ⅵ. 토론요지

생 략

Ⅶ. 심사결과

원안 가결

Ⅷ. 새 비목설치 및 상임위 감액사업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 결과

해당사항 없음

※ 별첨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대의견

※ 별첨: 부대의견

국회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한다.

(1)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경남·울산의 산불 피해에 대해 주택전파 피해자에 대한 주거비 총지원금을 최소 1억원 이상 지원하고, 피해 농가 생계비를 최대 12개월로 확대하며, 공장·상가 철거·복구 신규 지원과 농기계에 대한 정부 지원율 상향 등을 적극 강구한다.

(2) 고용노동부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재정건전성 악화 방지를 위해 변제금 회수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3) 교육부는 대전 초등학생 사망과 같은 유사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여 학교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내 CCTV 설치 확대 등 학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4) 국토교통부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재생에너지(히트펌프 등) 활용을 반영하는 등 현장수요에 부합하게 재설계하여 적극 강구한다.

(5) 국토교통부는 산불피해 이재민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예산이 산불피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는데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6) 기획재정부는 국회세종의사당 이전과 관련하여 설계 공모 등 원활한 절차 이행을 위해 조속히 총사업비 협의 절차를 완료한다.

(7) 문화체육관광부는 여객기 참사 및 산불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 숙박할인권 지원 등을 위해 기금변경을 추진한다.

(8) 산업통상자원부는 내역사업인 '조선해양기자재 및 중소형선박 해외시장개척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9)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위기 대응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10) 중소벤처기업부는 내역사업인 '취약상권 환급 활성화'와 유사한 온누리상품권 연계사업(환급, 할인 등)을 운영 중인 부처·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관리체계를 정비하도록 한다.

(11) 해양수산부는 여수박람회 정부 선투자금 상환과 관련하여,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한다.